

도, 기획예산처에 도정 핵심 현안 건의

김종훈 경제부지사,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완주전주 통합 지원·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 요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5국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IT △오일밸리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 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를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업 유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정부가 광역 행정 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인 완주·전주 역시 인구 규모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권한을 확대하고, 상생 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지원 지수에 대해서는 수도권과의 단순 거리 기준을 넘어 인구감소를, 재정지원도, 산업구조 등 복합적인 취약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역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해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6일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가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주요 현안 중양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5국 3특 균형성장 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산업 반영과 재정 특례 입법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과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이클레이 회원도시 가입

세계 최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국제 네트워크 합류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에서 이클레이(K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가입 인증서를 공식 전달받고 세계 최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이번 가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기후·환경 협력 무대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국제사회와의 정책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정책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받는 것은 물론, 전북의 기후·환경 정책을 세계와 교류하는 공식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순환경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등 유엔 정책과 연계한 국제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최대 플랫폼이다.

또한 도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국제공동사업 참여, 정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 글로벌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에너지, 자연기반해법, 순환경제 등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전북의 정책 역량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도는 향후 국제사회와 연대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탄력'

도, 우리금융그룹 '전북 금융 인프라 구축 계획'에 '환영' 2024년 6월 전북 창업 생태계 조성 등 협약 기반 후속 조치 2030년까지 1조6000억원 자금 공급·디노랩 전북센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우리금융그룹이 발표한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4년 6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우리금융그룹이 체결한 '전북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후속 실행 조치다.

당시 협약은 창업·투자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 ESG 경영 실현, 디지털·빅데이터 사업 협력,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 설치·운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할 계획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과 혁신 창업 지원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조 6,000억원(연간 3,5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 협약 당시 추진을 약속했던 '디노랩 전북센터'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지속 발굴하고, 전용 펀드를 활용한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예민 창업·투자환경 조성, '굿윌스'로 추가 설립과 '신한기계' 지원 확대 등 상상금융 사업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금융 인프라 확충이 자산 운용 특화 집적화라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요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의 연기금 기반을 활용해 자산운용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자본시장 핵심 거점 신설 및 지역 금융 생태계 강화

우리금융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전주 지역 근무 인력을 기존 200여 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용과 기업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핵심 거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의 전주사무소를 신설해 국민연금공단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전북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기업 대상 투·융자와 경영 컨설팅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전북선관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6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 등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90일 전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도내 상공인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쟁 멈추고 협력해야'

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이후 부산 지역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반대 움직임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공계는 "전북 도민들은 그동안 해안수산부나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상호 간 협력과 배려는 지역 관계의 기반이 되는데 불구하고 일방적 논리로 타 지역의 발전 기회를 제약하려는 태도는 윤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만을 앞세워 다른 지역의 정당한 도전과 기회를 가로막는 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훈"이라고 비판했다. /오상근 기자



주한 외국관광객 전북 초청 행사 26일 전주시 공 마당정원에서 열린 주한외국관광객 전북 초청 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주한외국관광객(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무공해차 5996대 보급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전기 5529대·수소차 467대 등 보급 추진... 기존 내연기관차 전환 시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총 1,328억원을 투입해 5,996대 규모의 무공해차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부문에서 전기승용차 3,858대, 전기 화물차 1,614대, 전기버스는 57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시 7,007대에 대한 전환지원금 지원을 병행한다. 수소차는 수소 충전소 4개소를 구축하고, 수소 승용차 380대, 수소 버스 87대를 보급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지난 1월 기후에너지 전환경부에서 확정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내연기관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보조사업의 특징은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전기승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 2백만원, 수소 승용차에 최대 3천 4백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배터리 에너지저장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 제조사의 사후 관리 체계와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 배터리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종별로 차등 선정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만큼, 무공해차 보급 확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송부문은 온실가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분야로, 그중에서도 화물차와 버스는 주행거리가 길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 대기오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전기 화물차와 전기 버스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에는 전기차 충전기 1만 6,151기와 수소 충전소 18개소가 구축돼 있으며,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맞춰 향후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총 1,328억원을 투입해 5,996대 규모의 무공해차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부문에서 전기승용차 3,858대, 전기 화물차 1,614대, 전기버스는 57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시 7,007대에 대한 전환지원금 지원을 병행한다. 수소차는 수소 충전소 4개소를 구축하고, 수소 승용차 380대, 수소 버스 87대를 보급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지난 1월 기후에너지 전환경부에서 확정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내연기관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보조사업의 특징은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전기승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 2백만원, 수소 승용차에 최대 3천 4백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배터리 에너지저장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 제조사의 사후 관리 체계와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 배터리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종별로 차등 선정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과제당 최대 6000만원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6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당 예산은 약 1억2천만 원 규모로, 과제당 최대 6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8개월 이내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기술 국산화 분야와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AI·소프트웨어, 로봇, 미래차 환경·에너지, 신소재,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폭넓은 분야가 포함된다. 신청은 기업 단독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도비가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민간 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지원금 6,000만원을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은 1,500만원 이내이며, 이 중 최소 30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매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거나 전체 매출 대비 소부장 분야 매출 비

중이 5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 기업이거나 공장 등록 또는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업,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도비 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며, 성공 판정 후 1개월 내 일시 납부 시 4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3월 26일 오후 4시까지이다. /오상근 기자